2013 외교백서

Diplomatic White Paper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3 외교백서

Diplomatic White Paper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2년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로서, 외교부로서는 그간 창조적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이루어 온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라는 외교비전 달성을 위해 막바지 노력을 적극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에 이은 2012년도 두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불확실한 북한정세 대응, 북한의 추가 도발억제 및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 유도를 위해 핵심 주변국들 및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특히,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미국과는 3월 한·미 FTA 발효로 한·미 동맹을 안보·경제동맹으로 격상하는 등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켰고, 중국 및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일본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올바른 역사인식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아시아 외교 강화 및 자원외교 추진, 각 지역과의 협력 포럼 내실화 등을 통해 실질적 외교지평 확대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우리의 국제적 기여와 위상 제고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 경주하였습니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2010.11) 및 세계개발원조총회(2011.11)에 이어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였고, 나아가 10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및 우리 주도의 최초 국제기구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발족,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을 통해 국제사회 내 우리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한편, 세계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둔화 추세 속에서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 창출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에 힘썼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뿐만 아니라, 3월과 8월에 각각 터키, 콜롬비아 등 주요 지역 신흥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 수가 2007년 말 16개국에서 2012년 45개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영토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외교는 급변하는 21세기 국제질서 속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외교 현안과 과제들을 하나하나 원만히 해결하고, 더 나아가 선제적·능동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켜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성숙한 세계국가로 거듭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거양한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 지연, 동북아 주요국들과의 역사문제 관련 갈등 지속

및 우리의 국가위상과 국제적 기여 간 괴리 등은 여전히 우리 외교가 헤쳐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위협행위 패턴은 다양해졌고, 도발의 빈도는 잦아졌으며, 강도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는 역사, 해양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불신이 증대되면서,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협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 및 초국가적 문제, 불확실한 국제경제 질서 등 글로벌 차원의 위협 요인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한 가운데, 올해 박근혜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바꾸고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궁극적으로 전 지구촌의 행복을 추구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며 동시다발적인 도전을 제기하는 외교 환경 속에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외교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새로운 국정기조에 따라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의 물결을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도전들에 전략적 · 입체적·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구촌 공생발전에 기여하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외교는 성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바탕이 될 때에만 비로소 신뢰외교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 외교백서가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우리 외교의 국민적 지지 기반을 더욱 넓혀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신뢰외교를 지향하는 외교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외교부장관 **윤 병 세**

1. 2012년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제1절 국제 정세 개관 10
제2절 외교정책 기조 21

2.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28
제2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35
제3절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45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56

3.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제1절 신아시아 외교 72
제2절 유럽지역 외교 86
제3절 중남미지역 외교 106
제4절 아프리카·중동지역 외교 117
제5절 지역 간(inter-regional) 외교 146

4. 경제·통상 외교 강화

제1절 G20 및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강화외교 160
제2절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167
제3절 에너지·자원협력 및 녹색성장 외교 190
제4절 양자·다자 통상외교 197
제5절 경제·통상 협력 진흥외교 225
제6절 경제·통상 외교 기반 확충 231

5.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제1절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 240
제2절 개발협력을 통한 나눔과 기여 실천 263
제3절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공공외교 강화 286
제4절 대외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301

6. 대국민 서비스 확충

제1절 재외국민 보호와 동포 권익 증진 312
제2절 해외진출 우리국민 편익 증진 325
제3절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333

7. 선진외교 체제 구축

제1절 인사·조직 개편 344
제2절 외교역량 강화 347
제3절 교육 및 평가제도 개선 350

부 록

1. 외교통상부 조직도 356
2. 외교관계 수립 현황 358
3. 재외공관 현황 360
4. 국제기구 가입 현황 362
5. 경제·통상 관련 현황 366
6. 2012년 조약 체결 현황 369
7.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 373
8. 재외동포 현황 376
9. 해외이주 현황 377
10. 여권발급 및 해외여행자 현황 379
11. 2012년 국제관계 일지 381



1

2012년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제1절 국제 정세 개관 10
제2절 외교정책 기조 21



제1절

국제 정세 개관

1. 국제 정치 정세

1) 개관

2012년은 세계금융위기의 후유증과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국제정치의 중심이었던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실업 및 재정적자를 비롯한 국내 경제문제 해법 마련에 집중하는 양상이었다. 이로 인한 미국의 국방비 삭감 논의 등은 국제안보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이 부상하고 세계 각국의 민족주의적 경향도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2년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대선 및 총선이 실시되어 정치 지도부 교체가 마무리된 한 해였다. 2012년 5월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집권 3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프랑스 대선에서는 올랑드 사회당

당수가 승리하며 17년 만에 좌파 정권이 등장하였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미·중 G2 체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하여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전반적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내산업 보호', '에너지·자원 확보' 등 국내 경제성장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대테러', '기후변화 대응', '핵 비확산' 등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였다.

중동정세는 이란 핵문제, 시리아 사태를 둘러싼 미국, EU, 러시아 등 주요국의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아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요원한 상황이며, 특히 2012년 11월 재현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군사적 충돌은 중동정세의 불안정성을 지속시켰다.

다만 2012년 3월 26-27일 양일 간 개최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실천지향적인 행동조치들을 마련하였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간 상호관계', '방사성 물질 안보 강화' 등으로 핵안보 논의 지평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2012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에서 당사국들은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단일한 협상틀 마련에 합의하고, 선진국의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일부 선진국들이 이 연장안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2) 지역별 동향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증대함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재균형 정책(rebalancing)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한국, 일본 등 기존의 양자 동맹 관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같은

역내 다자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해 나갔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였다. 미국과는 역내 리더십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도 상호 이익 존중 및 중대한 국제·지역 문제에서의 협조를 강화하는 의미의 '신형 대국관계'를 제시하는 등 협력 관계를 모색하였다. 한편,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 조어도) 국유화 조치에 대해 중국이 영해기선 선포 등으로 대응하면서 중·일 간 분쟁이 심화되었다.

일본에서는 연초 노다 내각이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노다 전 총리는 5월 1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 후 6년 만에 양국 간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자유항행의 원칙,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체제 구축 등의 미·일 동맹 강화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여론 악화로 중의원이 해산되어 12월에 총선이 실시된 결과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2006년에 이어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하였다.

2012년 한·중·일 3국 관계는 영토 및 역사문제로 인해 경색국면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3국은 연례 정상회의 개최 및 '3국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출범(2011.9) 등 제도화의 진전에 힘입어 2012년 11월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3기 정부는 국제적 위상 회복과 경제발전을 목표로 실용주의적 외교를 전개하였다. 2012년 8월 WTO 협정 발효를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적극 수용하였으며,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향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 베트남 및 필리핀 등 관련국 간 갈등이 고조되었다. 2012년 7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제45차 ASEAN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남중국해 문제 관련 문안 합의에 실패하여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하는 등 ASEAN 내부의 분열 양상도 나타났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4월 개최된 재보궐선거 결과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최초로 의회에 진출하여 민주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서남아 지역은 다양한 테러 및 분리주의 활동과 같은 안보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하여 NATO의 아프가니스탄 출구전략으로 인한 치안공백의 우려 속에서도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상황은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지속적인 관여와 아프가니스탄 군경의 강화로 개선되고 있다. 한편 인도와 파키스탄은 경제·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카슈미르 문제, 군비경쟁 등의 장애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11년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2012년 유럽 국가들은 자국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였다. 그 가운데 독일은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프랑스 등과 함께 EU 내의 각종 현안 논의를 주도하며 역내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 '통합된 EU'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중이나, 재정위기 해소 과정에서 회원국간, 산업간, 계층간 갈등이 심화된 만큼 역내 정치경제적 신뢰회복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형성을 목표로 CIS 국가들과의 경제통합 및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지역에서는 2012년 4월 개최된 제6차 미주정상회의(OAS)가 쿠바의 참석 문제, 포클랜드(말비나스) 섬 영유권 문제에 관한 당사국 간 이견으로 실효성의 한계를 노정하였다. 한편 12월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에서 쿠바가 의장직을 수임함에 따라 CELAC은 미국의 과도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에서 탈피하여 역내 국가 주도의 내부 문제 해결 및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파라과이는 2012년 6월 발생한 경찰과 농민 간 유혈충돌로 루고(Lugo) 당시 대통령이 의회에서 탄핵되었으며, 이로 인해 파라과이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로부터 신정부출범까지 회원국 자격이 잠정 중단되었다.

또한, 베네수엘라에서는 차베스(Chavez) 대통령이 2012년 10월 대선에서 승리

하여 4선에 성공하였다.

중동에서는 '아랍의 봄(Arab Spring)'을 통해 권위주의에서 벗어난 국가들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재건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는 등 2012년에도 정세 불안이 지속되었다. 리비아는 2012년 7월 사상 최초의 주민투표를 통해 제헌의회를 구성하였으나 내각 구성을 둘러싸고 총리와 의회가 갈등을 겪었다. 이집트는 2012년 6월 최초의 민선 대통령으로 취임한 모르시(Morsy) 대통령이 11월 대통령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신헌법선언을 발표한 이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다.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국가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사드 정권에 대항한 반군이 북부지역 및 주요 시설을 장악하는 등 세력을 넓혀감에 따라, 2012년 12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우방국 회의에서 '시리아국민연합(SNC)'이 시리아 국민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승인받았다.

한편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E3(영국, 프랑스, 독일)+3(미국, 중국, 러시아)-이란 간 회담이 수차례 개최되었으나, 당사국들은 상당한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교착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2012년 1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군사적으로 충돌하며 큰 난관에 봉착하였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은 동년 11월 21일 양자가 정전에 합의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팔레스타인은 2012년 11월 29일 유엔 비회원국 옵서버 국가 지위(Non-member Observer State Status)를 획득하며 향후 국제무대에서 국가로서의 권리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대내적으로는 종교·인종·이념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초국가적 테러리즘으로 인해 역내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특히, 말리(Mali) 및 기니비사우(Guinea Bissau)에서는 군사정변이 발생하였고 말리 북부지역에서 시작된 내전의 확대가 사헬지역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는 대내갈등을 관리할 자체 거버넌스의 부재로 인하여 상황이 내전으로 치달아 더욱 악화되었다.

2. 국제 경제 동향

1) 개관

2012년 세계 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가운데,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심화로 2011년 3.9%보다 낮은 3.2%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2.3%), 유로지역(−0.4%), 일본(2%) 등 선진국 경제는 2011년 1.6% 성장에 이어 2012년에도 1.3%의 저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신흥경제권 및 개발도상국의 경우, 아시아(6.6%), 중남미(3.0%), 러시아(3.6%), 동유럽(1.8%) 등은 전년대비 성장률 하락을 기록한 반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5.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작년(3.5%)보다 상승하였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중국은 전년도(9.3%)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7.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미국도 2%대의 성장률을 시현하며 전년도(1.8%)에 비해 상승하였다.

서방 경제는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업문제가 큰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2012년 실업률은 미국(7.8%), EU(10.7%)에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스페인과 그리스는 26%를 넘어서는 등 실업문제가 사회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재정적자 해소를 통해, 중국 등 신흥경제국들은 자국 내수시장의 진작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유로지역은 역내국들의 재정위기 악화를 막기 위해 유럽안정화기구(ESM :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출범과 유럽중앙은행(ECB : European Central Bank)의 국채매입 확대 등으로 당면한 위기 해결을 위한 조치를 진행해 가고 있으나,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화와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한 성장률 저하라는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또한 의회와 행정부가 재정절벽

(Fiscal Cliff) 관련 협상에 난항을 겪었으며, 2012년 12월 극적인 타결에도 불구하고 예산자동삭감(sequester) 등의 잠재적 불안요소가 남아 있다.

G20 정상회의 등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다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 경상수지 흑자 확대 노력과 같은 보호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선진국 통화에 비해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여기에 대응하여 신흥경제권은 수입규제 조치를 사용하는 형태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어 국제경제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지역별 동향

미국은 2012년 3/4분기 3.1%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4/4분기 재정절벽 우려로 인하여 정부지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2012년 전체로는 2.3% 성장에 그쳤다. 예산자동삭감(sequester),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인한 경기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를 실시하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위안화 절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수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방안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7.8%의 실질 경제성장률(IMF,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을 기록하면서 유로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수출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투자와 순수출 부문의 기여도가 부진한 가운데, 15년 만에 최초로 경제성장률이 8%를 밑돌면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소득 불균형, 투자 위주의 경제 구조로 인한 내수 위축 등에 대응하여 소비 진작 및 성장 동력 확충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2012년 상반기 대지진 복구 수요에 힘입어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해 연 성장률 2%를 기록하면서 경기부진이 이어졌다. 특히

중국과 유럽의 경제둔화로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원전 가동 중지에 따른 발전용 연료 수입 급증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 12월 출범한 아베 신정부는 디플레이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엔고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였다.

러시아는 2012년 IMF 추산 3.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생산과 내수 부문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 경기 침체, 여름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4%대의 성장률 확보에는 실패하였다. 러시아는 2012년 8월 WTO 정식회원국이 되었고, 스콜코보(Skolkovo) 혁신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산업다변화를 비롯한 러시아 경제구조의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였다.

ASEAN 국가들은 2015년까지 ASEAN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을 목표로, 2012년 11월 ASEAN 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가 선언된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세계 경기 침체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국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6%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멀티브랜드 소매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허용, 정부보조금 축소, 공기업 매각 등 일련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2012년 9월 이래 각종 경기선행지수가 개선되었다.

2009년 10월 촉발된 경제위기는 그리스의 부채위기로 이어진 후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유로 지역은 재정 적자, 경기 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 역내국가 간 무역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재개에 합의하는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EU는 중장기적인 차원의 경제통합 심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12월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EU가 유로존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 '단일금융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설립 추진에 합의하는 등 통합된 금융위기관리시스템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은 2012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1차상품 수요하락, 유럽 재정

위기의 여파로 성장세가 3%대로 다소 하락하였다. 특히 이 지역 생산량의 약 3/4을 차지하는 1차상품의 수요 및 가격하락은 교역조건의 악화를 가져와 중남미 국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가입 등 역내 국가들의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12년 6월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등 4개국은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의 법적기반이 될 기본협정문에 서명하며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옵서버 국가가 증가하는 등 타 대륙 및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중동 지역은 시리아 사태를 포함한 '아랍의 봄(Arab Spring)'으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석유수출국의 원유 생산량 확대 및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 회복,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평균 5%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아프리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012년에도 5%대의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특히 자원개발의 확대와 저소득 국가들의 경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새로운 유전이 개발되고 있는 앙골라나 차드 등의 경제지표는 개선된 반면, 유럽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3. 한반도 및 주변 정세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북한은 김정은을 2012년 4월 11일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제1비서로,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7월 18일에는 공화국 원수로 추대하였다. 김정은은 당과 군 조직을

장악하면서 외견상 안정적으로 권력 공고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미국과 북한은 2012년 2월 비핵화 사전조치 관련 2.29 합의를 채택하였다. 이 합의에서 북한은 미국의 영양지원 등을 대가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졌으나, 북한은 두 달도 되지 않은 지난 4월 13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인공위성 발사 명목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이러한 기대를 또다시 저버렸다.

또한 북한은 4월 개정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하고, 외무성 대변인 성명 및 비망록 등을 통해 '핵억제력 강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공언하는 등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12월 12일에는 4월의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재차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국제사회는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이 같은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였고, 2013년 1월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채택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응하여 제재조치를 강화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으나 4.13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2.29 합의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미국 내부적으로 대북 협상 재개의 모멘텀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중국은 2011년 미·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지난 12월 유엔안보리 결의 2087호에 합의하며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였다. 일본은 납치문제와 미사일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2012년 11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008년 이후 중단된 북·일 협의를 재개하며 4년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듯하였으나 북한의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로 인해 협의를 중단하였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김정은이 4월 15일에 시행한 첫 대중연설에서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한 뒤 여러 계기에 민생개선과 경제 발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간 북한 당국이 '6.28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시행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행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 북한은 '생눈길정신', '1970년대 시대정신', '자력갱생' 등 과거지향적인 구호를 부쩍 강조하면서 뚜렷한 제도적 변화 없이 평양시 미화, 놀이공원 정비 등 전시성 사업에 자원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은 외화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 경제협력 강화를 일부 시도하였다. 특히, 8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방중 이후로 북·중 경제협력 논의가 가속화되어 황금평 및 나진선봉 특구개발, 북한경제특구 투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양측 간 경제협력이 추진되었다. 현재 상호 교역액은 북한 전체 대외교역에서 약 70%의 비중(2011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 간 교역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 '5.24 조치'의 기조 하에서도 개성공단의 생산성 증가로 인하여 2012년에는 전년도 17억 1천 불 대비 15.0% 증가한 19억 7천만 불을 기록하였다.

제2절

외교정책 기조

정부는 2012년에도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속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도전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비전 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하였다. 특히,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외교, ▲세계공영에 기여하는 외교,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외교,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 등 4대 외교정책 기조에 따라 주요 외교 현안 해결 및 과제 추진에 주력하였다.

1.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외교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주변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확보, 북한 도발

억제 및 북한 정권의 진정한 태도변화 유도를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2년 2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활동 중단을 골자로 하는 미·북합의 도출 등 성과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후 북한의 일방적인 동 합의 파기,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 및 핵보유 의지 노골화 등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결여로 비핵화 협의는 교착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주변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 등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진력하였다.

한편,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미국과는 최상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한 다층적 협의채널 강화,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실질성과 도출 및 지역·범세계적 문제에 있어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켰다. 중국과는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정치·외교뿐 아니라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실질협력을 지속 확대하였다. 일본과는 과거사 현안 해결 노력과 함께, 독도관련 일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면서 올바른 역사인식에 입각한 양국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러시아와는 2012년 5월 푸틴 대통령 취임 후 러 신지도부와의 협력관계 조기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극동시베리아 개발관련 양국 민·관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강화 등 실질협력관계를 지속 심화하였다.

아울러, 각 지역 주요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노력도 지속하였다. 2012년 5월 우리 대통령이 29년만에 미얀마를 방문하였으며, 9월에는 인도네시아에 주 ASEAN 대표부를 개설하는 등 신아시아외교 내실화에 힘썼다. 유럽과는 활발한 정상외교 및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켰으며, 중남미와는 6월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 등 계기 정상 순방, 한·중남미 고위급 협력포럼 등을 통해 실질협력을 확대하였다. 한편, 아중동지역 다수 국가들과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정상 포함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실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2. 세계공영에 기여하는 외교

정부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및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2012년에도 글로벌 현안에 대한 관리 및 해결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높였다.

특히, 3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핵테러 방지를 위한 실천적 비전과 행동조치를 담은 '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하고 참가국들의 핵안보 공약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10월에는 2013-14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지역분쟁,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주요 이슈에 있어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외,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강화, 아프간 재건 및 사이버안보 활동, 대테러·해적활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 동참 등 세계평화 증진에 적극 기여하였다.

한편, 개발협력을 통한 나눔과 기여 실천의 일환으로 우리 주도로 채택된 G20 개발의제의 원활한 이행에 노력을 경주하면서, 2011 부산총회 합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6월에 출범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이행 또한 활발히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장관의 「Post-MDG 유엔 고위급 패널」위원 활동을 통한 개발관련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에 걸맞은 기여를 수행하기 위해 ODA 규모 확대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외교

정부는 세계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 둔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FTA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외교 추진기반 마련,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 확대, 자원부국들과의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기체결 FTA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우리의 경제영토 확장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 창출에 주력하였다. 정부는 미국, EU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적극 이행하였고, 3월과 8월에는 터키, 콜롬비아와 각각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경제국들과의 양자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 말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등 총 45개국과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의 경제영토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전파 및 국제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0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국제기구화 달성에 이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로 국제사회에서 녹생성장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이에 앞서 3월에 설립된 녹색기술센터(GTC)와 더불어 전략(GGGI)-기술(GTC)-재원(GCF)으로 이어지는 녹색 트라이앵글(Green Triangle)을 완성하였다.

또한, 에너지·자원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확대 및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였다. 아울러, 중앙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자원부국들과의 석유, 가스, 인프라 개발 협력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9월에는 대통령의 그린란드, 노르웨이 방문을 통해 북극지역 항로 개척 및 자원개발 협력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였다.

4.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해외진출 지원과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뉴미디어 활용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우선, 워킹홀리데이 협정체결국 지속 확대 등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24시간 영사콜센터 운영, 신속대응팀 운영 확대 등 재외국민보호 대응 시스템 강화를 통해 우리국민들의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재외국민선거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였다.

아울러,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유투브를 포함한 SNS 등의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과의 실시간·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뉴미디어를 국민들의 외교정책과정 참여 채널로 활용하였다.